

# 정보공개 업무편람

2019. 3.

김포도시공사

#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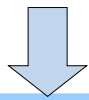
I.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4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4
2. 정보공개의 의의 .....	4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5
4. 정보의 공개방법 .....	6
5.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7
II.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	8
1. 청구 대상기관 .....	8
2. 정보공개 청구권자 .....	8
3. 정보공개 청구방법 .....	8
4. 청구서 처리 흐름도 .....	9
5. 청구서 처리 절차도 .....	10
6.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	11
7. 정보공개 청구 .....	12
8. 청구인 확인 .....	13
9.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통지 .....	14
10.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14
11. 제3자의 의견청취 .....	15
12. 수수료 .....	17
13. 정보의 공개 실시 .....	19
14. 반복청구의 처리 .....	22
15.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	23

Ⅲ. 비공개대상정보 .....	23
1. 정보공개의 원칙 .....	23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24
3. 항목별 비공개대상 정보 .....	25
4.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26
Ⅳ. 이의신청 .....	32
1. 불복 구제절차 .....	32
2. 이의신청 순서도 .....	36

# I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2 정보공개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1992. 1. 4)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2001. 11)
  - ❖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연
- 국무총리 훈령 『행정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지침』 제정(2003. 6.24)
  -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 우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제442호)을 제정
- 정보공개법의 개정
  - ❖ 2004. 1. 29 법개정 공포, 2004. 7. 30 시행
  -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 국회 본회의 의결(2003.12.23)
  -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4. 7. 29), 시행(2004. 7. 30)
  - ❖ 2006. 10. 4 법개정 공포, 2007. 1. 5 시행 : 법률(제9조제3항) 신설
  -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법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2013.3.23. 시행, 법률 제11690호 )

## 4

## 정보공개 방법

### ●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5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 Ⅱ . 정보의 공개청구 및 처리

### 1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3 정보공개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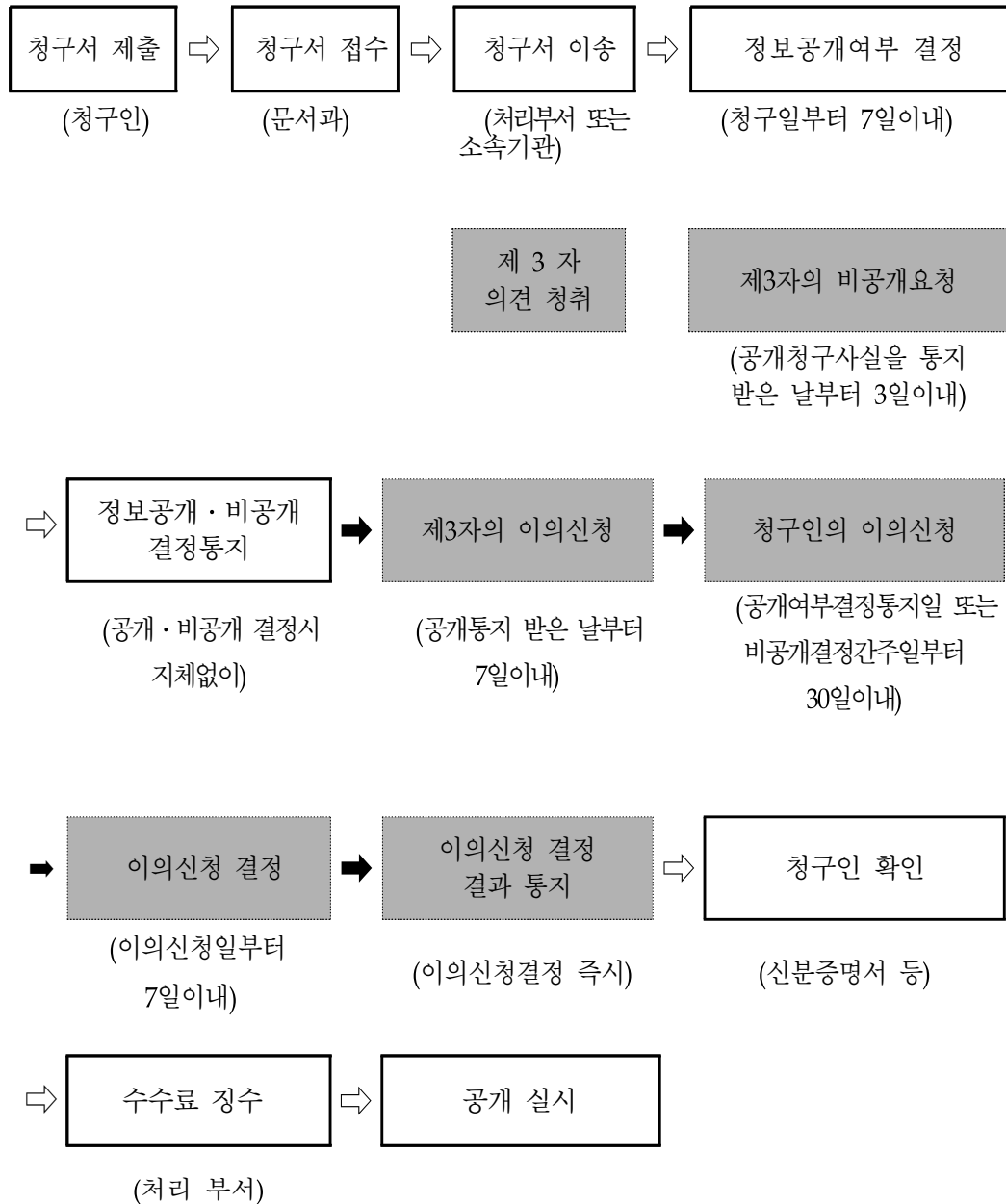
####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하여 FAX로 전송

####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 범례 □ ⇨ : 필수절차

■ ⇨ : 임의절차

## 청구서 처리절차도



## 6

##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처리사항

순 서	처리부서	처 리 사 항
1	청 구 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2	기획예산팀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 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
3	처 리 부 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4	처 리 부 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
5	기획예산팀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
6	처 리 부 서	- 수수료 수입 결의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7	처 리 부 서	- 이의신청서 사장 보고와 사장의 공개결정여부 요청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8	처 리 부 서	이의결정통지(7일 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li> <li>☞ “구술”에 의해서도 청구 가능</li> <li>•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li> <li>•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li> </ul>
-----------------	---

####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공개할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 두 9212)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 결정기간의 기산점

- ❖ 직접 방문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 인터넷 청구 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됨)

### ● 본인 확인의 시점

-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 본인 확인 방법 (영 제15조 제2항)

-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외국인인 경우 : 여권 · 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외국단체등록증
  -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제15조 제3항)

-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li> <li>●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li> <li>•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li> </ul> </li> </ul>
-------------------------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 11

## 제3자 의견청취

제3자 통지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li> </ul> </li> <li>●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li> </ul> </li> </ul>
------------------	--

-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 ♣ 의견청취제도에 관한 판례

- (1)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대판 1995. 12. 22, 95누30)
- (2)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 (3) 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 전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대판 2004. 7. 8. 2002두8350)

## 12

##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 ❖ 담당부서(처리부서)의 소속별로 구분하여 수입금 처리(결재선: 팀장 전결)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13

정보공개실시

공 개 실 시 (처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구인 준비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li><li>※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li></ul></li></ul></li><li>● 공개의 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li></ul></li><li>●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li></ul>
-------------------	--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 할 수 있어야 함

####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 가능

## □ 즉시 공개

### ❖ 즉시공개 요건(법 제16조)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 ❖ 정보 생산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에도 당연히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 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부분 공개

-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 비공개 결정통지

###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 14

## 반복되는 정보공개의 처리

-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 2회 이상 반복청구 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 ❖ 비공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 15

## 정보공개 민원이첩 처리

###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민원회신” 문서 발송)

## Ⅲ. 비공개 대상 정보

### 1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법 제3조)
  -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법 제6조)
  -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 2

#### 정보공개여부 결정방법

- 비교형량의 원칙
  -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의 태도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대전지법 2002구합 2873)

● 법령의 적용 방법

-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

●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이를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한정적 열거”로써 이를 확대,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3

## 비공개 대상정보

- ①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⑤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 ⑥ 개인정보(제6호)
- ⑦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⑧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 문 내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 등 사 항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민 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수입금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중에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전 략 기 획	신규사업추진·전략수립에 따른 외부기관 연계, 예산 편성 업무 중 취득한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 문 내 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방위	직장 민방위대 현황 및 훈련, 을지연습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 감 관 련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토 지 거 래	개인 및 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연 구 보 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및 비공개 대상 결과보고서
전 문 위 원	자문·평가위원 명단, 지원자 정보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4호 (개정)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 송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정)
조 문 내 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상 급 기 관 감 사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직 원 징 계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문 책 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복 무 기 강 사 장 정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민 원 부조리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청렴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청렴도 측정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 는 정보
시 험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채용 · 충원, 교육훈련, 직원 처 우개선, 직원 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 사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 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 · 정책수립을 위한 내 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 직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무	자문 요청서 및 자문 회신서의 내용, 자문변호사의 인적사항
입 찰 계 약	입찰·계약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 계 관 리 홈페이지 시스템 유 지 보 수	개인정보 및 공정한 입찰 또는 계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일용직급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계약 또는 입찰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료 지급 및 공 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계약 또는 입찰 정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료 지급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계약 또는 입찰 정보
노 무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 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전 산 관 리	공사가 소유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 할당현황 포함)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공사의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입찰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의견수렴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자료, 신고심사와 관련된 심사의견, 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회의자료	각종 심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ex/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등)
용역선정	학술연구용역 등의 선정 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안운영	제안제도와 각급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와 채택 제안 및 직무발명의 특허 계승 시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수 있는 발명관련사항, 출원정보 등
신규사업	신규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업계획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예산편성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홍보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기타 업체·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가 공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연구수행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정)
조 문 내 용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i> <li>2.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li> <li>3.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4.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i> <li>5.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i> </ol>
업 무 추진비	<p>다음 각 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p> <p>가.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의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p> <p>다.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p> <p>라. 법인, 단체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p>
직 원 급수 당	개별 직원 급여 압류 등에 관한 정보
서 무	비상연락망, 평가위원추천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
공 고 요 인 무 원	신상명세서, 검직신청, 교육통지, 개인 계좌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
자 연 휴 양 예 약	자연휴양림 예약 관련 예약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
자 연 휴 양 예 약 용	자연휴양림 근무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차 량 조 정 회 보	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 및 압류 등의 업무를 위한 차량번호, 차주명, 주소지 등의 개인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견 인 업 무	불법주정차 요금 부과시 기재하는 차주 성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의 개인 인적사항 정보
공 매 차 량	공매차량 매각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시와 구청에서 통보받게 되는 차량번호, 체납자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인적사항 정보
장 사 사 설 사 신 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봉안, 자연장, 장례식장, 유택동산 이용시 제출하는 사망자, 사용자, 신청자, 연고자 등에 관한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한 정보 포함)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정)
조 문 내 용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i> <li>2.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li> <li>3.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4.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i> <li>5.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i> </ol>
교 통 약 자	교통약자 이용자(장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
성 과 정 보	성과관리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 산 자 료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업 무 관 계 자 자 료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평가위원회, 설계자문)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및 연구사업, 용역, 임대 등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 문 내 용	<p>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p> <p>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구 분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분 양	<p>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p> <p>그밖에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p>

## V . 이의신청

### 1

### 불복 구제절차

#### ● 불복사유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 처리절차



#### ● 불복제기절차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 이의신청 처리기간

-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 ● 이의신청 방법

-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 행정심판(법 제19조)

### ● 대 상

-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대 상

-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재결청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급 상급기관
-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심판청구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 재결기간

-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 ●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 제4항)

##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98. 3부터 시행)

##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 ※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결정 종류

- ❖ 각하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재결 · 판결).
-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재결 · 판결).
- ❖ 인용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 재결 · 판결)

## 2

## 이의신청처리 순서도



###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사장 보고  
(처리부서)



사장 공개 여부  
재결정  
(심의 · 결정)



결정결과 통지



행정심판 · 소송 등

-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장 보고

- 처리부서는 검토의견 설명 등 심의 대응 및 자료 보존

- 처리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제18조제3항)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발행 '2013년 정보공개 업무편람'